

한전공대 건축 인허가 내년 2월까지 완료...5월 착공

도, 정상 개교 지원책 마련...2022년 2월 사용승인 계획 '교육환경 조성' 전남과학고 한전공대 부근 이전방안 검토

전남도는 28일 "한전공대 2022년 3월 정상 개교와 세계최고 에너지 특화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한 교사(校舍) 건축 액션플랜(Action plan)과 연구기반 조성, 정주여건 개선 등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는 개교까지 남은 시일이 촉박함에 따라 교사 건축 착공 일정을 앞당기기 위한 액션플랜(Action plan)을 만들었다.

도는 한전, 나주시와 협의해 올해 안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마치고 실시계획 인가와 건축허가 등 인허가 기간을 내년 2월까지 최대한 단축, 늦어도 내년 5월엔 착공해 2022년 2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개교할 계획이다.

한전공대 육성에 필요한 연구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연구소 및 클러스터 부지 80만㎡(대형연구소 40만㎡, 클러스터 40만㎡)에 대한 '기본계획 및 지방재정지원 타당성 조사 용역'도 내년 1월까지 마칠 예정이다.

용역을 통해 세계 최고 에너지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산학연 공동연구가 추진되고 창업자와 중소기업에 지원 등이 이뤄져 글로벌 산학연의 중심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화연구시설 구축도 한전공대 시설 확보 계획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들어간다.

한전과 전남도는 미래 에너지 분야 혁신소재 및 원천기술 확보, 산학연 공동연구 및 분석지원으로 기술사업화를 이끌 거점 연구센터를 기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에너지신소재분야 전문가들로 기획위원회를 구성, 국가 R&D사업 연구시설 구축을 준비 중이다.

또한 한전공대 교직원 등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우수한 교육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전남과학고를 한전공대 인근으로 확대 이전하고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방안도 교육청과 협의하고 있다. /김재정기자



청렴문화 확산 캠페인 추석 명절을 앞두고 28일 오전 광주시청 1층 로비에서 진행된 '청렴 조직문화 확산 캠페인'에 참여한 이용섭 시장이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절대 문화 N O, 각자네기로!'란 문구가 적힌 마스크를 나눠주고 있다. (광주시제공)

“공공기관 2차 이전은 대촌으로”

광주 남구, 도철산단·에너지밸리 등 경자구역 시너지 앞세워 유치전

광주 남구가 2차 공공기관 유치전에 뛰어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동남갑) 국회의원, 김병내 남구청장, 박희을 남구의회 의장과 더불어 민주당 소속 시·구의원들은 28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과 혁신도시 추가 지정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한 규모와 대상, 지역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계획이 없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조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고 지역 간 불균형 문제와 더불어 지역 내 불균형 발전 문제도 개선해 역동적이고 활력있는 지방도시를 육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참여정부 시절 추진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 후 정주인구, 지방세 수입, 지역인재 의무 채용률 증가 등 지역발전의 효과도 있었지만 교통과 교육, 의료서비스 등 정주여건 불만족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구는 공공기관 1차 이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광주·전남의 상생 발전과 공동혁신도시의 조성 취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래에너지 신산업 집중 육성을 위해 조성한 도시첨단산업단지과 에너지밸리는 최근에 광주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다”며 “공동혁신도시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이점을 살려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 남구 대촌 일대에 공공기관을 이전해 공동혁신도시가 규모의 경제를 갖춘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발전해 광주와 전남의 공동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남구지역은 문화교육특구로 교육·주거·문화 등에 대한 우수한 인프라와 도시철도 2호선과 국도1호선, 제2순환도로가 남구 중심을 관통하여 광주와 전남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이다”며 “남구의 우수한 문화 교육 인프라가 보완되면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상 임직원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대기기자

광주천·용봉천 복원, 비엔날레 국제타운, 대촌-나주 도로확장

광주지역 SOC 4개 사업 예타 통과 못했다

최근 5년간 종합평가...수도권·비수도권 격차 커 제도 개선 시급

최근 5년간 광주 사회간접자본(SOC)사업 가운데 4개 사업이 예비타당성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김두관 국회의원이 KDI 공공투자센터(PIMAC)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예타에 올라온 103개의 SOC 사업 가운데 27건이 종합평가(AHP) 0.5 미만으로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년간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 가운데 수도권은 6건, 비수도권은 21건으로 비수도권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비수도권 중 예타에 통과하지 못한 광주지역 사업은 광주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지방하천정비)사업, 용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비엔날레 상경 국제타운조성, 광주 대촌-나주 급전간 도로확장사업 등 4건.

수도권의 경우 총 34건 중 6건이 탈락해 82.4%의 통과율을 보였으며, 비수도권의 경우 총 69건

가운데 21건이 탈락해 69.6%의 통과율을 보였다. 지역에 대한 배점을 달리해 문턱을 대폭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합평가에 있어 경제성을 의미하는 BC수치는 여전히 비중이 커서, 0.9 이하의 수치로 통과된 사업은 춘천-속초 철도(0.79),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사업(0.83), 광양항 낙포부두 리뉴얼 사업(0.85), 광주 송정-순천 단선전철(0.88) 네 곳 밖에 없었다.

반면, BC를 0.9 이상을 받고서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은 없었다.

김 의원은 “예타는 배점을 개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BC 점수는 위력적”이라며 “사업시행의 관문이 되어버린 예타의 전반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9월 7일 예타 제도의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임재만기자

정의당 전남도당위원장에 이보라미 도의원

정의당 전남도당은 신임 도당 위원장에 이보라미 전남도의원(영암2)을 선출했다고 28일 밝혔다.

부위원장에는 최현주 전남도의원과 김도담 전남도당 청년학생위원장이, 전국적으로 53명을 뽑는 전국위원은 여인두 전 목포시의원과 김도담 청년학생위원장이 선출됐다.

이 밖에 각지역위원회 위원장에는 곡성·구례군 위원회 위원장에 박응두 중앙당 농·어민위원장, 목포시위원회 위원장에 백동규 목포시의원, 순천시위원회 위원장에 김미애 순천시의원이 선출됐

다. 또한 영암군위원회 위원장에 김석원 영암군위원장, 해남군위원회 위원장에 오영택 해남군위원장이 각각 연임에 성공했다.

이 위원장은 당선 인사를 통해 “현장 당원들의 목소리가 의정활동을 통해 제도화되는 과정을 통해 당원을 주제로 세우겠다”며 “당이 민생 현안을 적극적으로 풀어나가 그 힘을 바탕으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재만기자

김종인 또 호남행...“수해복구 지원에 최선”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추석 연휴를 이틀 앞둔 28일 구례를 방문해 수해 복구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민심을 청취했다.

김 위원장은 구례 종합사회복지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수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당한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충분치 않다는 것을 안다”며 “적극적인 지원이 되도록 국민의힘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 일행은 김영록 전남지사, 김순호 구

례군수 등과 만나 수해 피해 규모와 현재 복구 상황을 보고받고, 지역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이 추석을 앞두고 다시 구례를 방문한 것은 당 차원의 호남 민생 챙기기가 일회성이 이벤트가 아님을 보여주려는 뜻으로 알려졌다. 이날 방문에는 김선동 사무총장, 송언석 비서실장, 윤희석 대변인이 동행했다. /구례=이성구기자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모든 운전자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횡단 시 일단 멈춤!

(교차로 우회전 포함)

위반 시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

공익신고는 「스마트 국민제보」

전라남도 JeollaNamdo

전남지방경찰청 JEONNAM PROVINCIAL POLICE AGENCY

IOS 용 Android 용